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아우내 어게인!

김진기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책임연구원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감수 : 충남연구원장 윤항

CONTENTS

1.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2. 이웃을 위협하는 일본의 무역정책
3. 자립적 산업구조 확립의 필요성
4. '아우내 산업단지'와 충남형 개방혁신 플랫폼의 제안

〈요약〉

- ◀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가격과 기술이 우수한 일본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는 자유무역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함
- ◀ 일본이 자국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 100년 전 일본의 불법적 강점에 대한 결연한 저항운동은 오늘날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음
- ◀ 국민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주의의 파고에 맞서 자립적 국가 산업구조 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도는 '아우내 산업단지' 조성 and 소재부품산업 개방혁신플랫폼 구축으로 힘을 보탬 것을 제안함
- ◀ '아우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지역혁신 인센티브, 충남형 일자리 인센티브, 에너지 인센티브, 밀착형기업지원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01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경제체제를 협의하였으며 당시 미 재무장관인 헨리 모겐소는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모두의 노력, 즉 국제협력이야말로 회원국들의 이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함
 - 브레튼우즈 협정의 결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설립되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8)’과 이후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 1995) 역시 상호협력을 통한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의 산물임
 - 선진국 모임인 G7,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G20 등 국가 간 협의체 역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이념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무역은 지난 반세기 가까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음

[표 1] 세계와 우리나라 수출입규모 추이(단위: 억불, 배)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2018/1970
세계무역 (억불)	5,096	31,585	69,047	129,520	305,425	391,096	77배
한국무역 (억불)	27	394	1,352	3,328	8,916	11,443	42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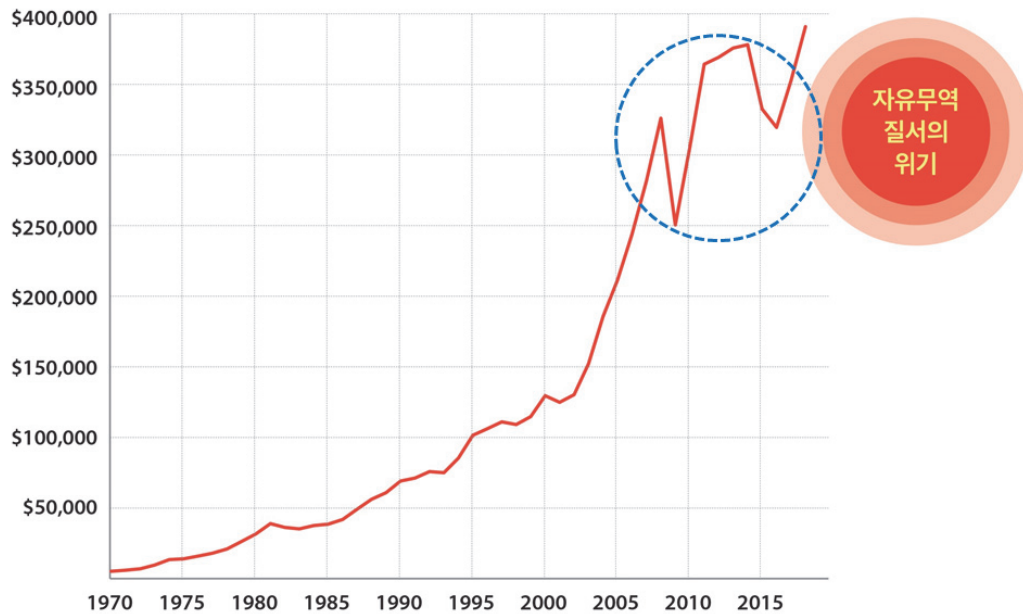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원자료 IMF)

- 1970년 세계 무역총액은 5,096억 불에서 2018년 39조 1,096억 불로 77배 성장하였으며¹⁾ (연평균 12.1%)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역시 동 기간 27억 불에서 1조 1,443억 불로 422배 성장하였음(연평균 17.5%)
 - 우리나라는 수출입규모 면에서 2018년 기준 세계 7위로서 프랑스(6위)와 이탈리아(8위) 사이에 위치한 세계무역 강국 가운데 하나임 (참고: 중국 1위, 미국 2위, 일본 5위)

1) 런던정경대와 브루킹스연구소에 의하면 1950~2017년 세계무역량은 39배 증가함,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 (2019.07.10).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세계무역규모는 전년대비 23.2% 감소하였는데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으며 이후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경제위기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12.1%, -3.9%의 감소충격이 있었음
 - 상호협력과 자유무역이라는 기존질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등 자국경제에 대한 보호주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음

〈그림 1〉 세계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불)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보호(주의)가 위대한 번영과 힘으로 인도할 것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이라 단언한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정 하였음
 - 미국이 2018년 EU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와 최근 10% 추가 관세와 관련 첨예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
 -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 보안을 문제 삼은 미국은 무역과 국가안보를 연계하여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쌀) 수입물량 제한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02

위협적인 이웃 국가의 무역정책

- 지난 8월 2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포토리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공포(7일)함에 따라 해당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 여부에 의해 한국으로의 수출이 결정되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리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였으나 향후 허가 심사를 지연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 규제품목의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상존함
 - 한국 수출의 주요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부품 수급을 방해함으로써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본이 전 세계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산업성장을 저지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일본이 자국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기업과 경제에 손실을 끼치려는 의도를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며 일본은 선량한 이웃국가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음
 - 한편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향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고 이번사태를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국 간 근본적인 협력관계의 손상은 복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일본뿐 아니라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중국인 관광객 및 수출 감소로 적게는 7조 3천억에서 최대 16조 2천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한국수출입은행)이 있었으며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현대기아차(5조), 롯데마트(5천억)의 매출감소도 보도되었음²⁾
 - ⇒ 이웃국가들의 위협적인 무역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이 요구됨

2) 한겨레, <http://www.hani.co.kr> (2017.07.05).

03 자립적 산업구조의 확립

-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70년대 본격적인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였음
 - 특히 소재부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2001년 620억 불 규모의 수출은 2018년 3,162억 불로 5배 성장하였으며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수지 역시 크게 개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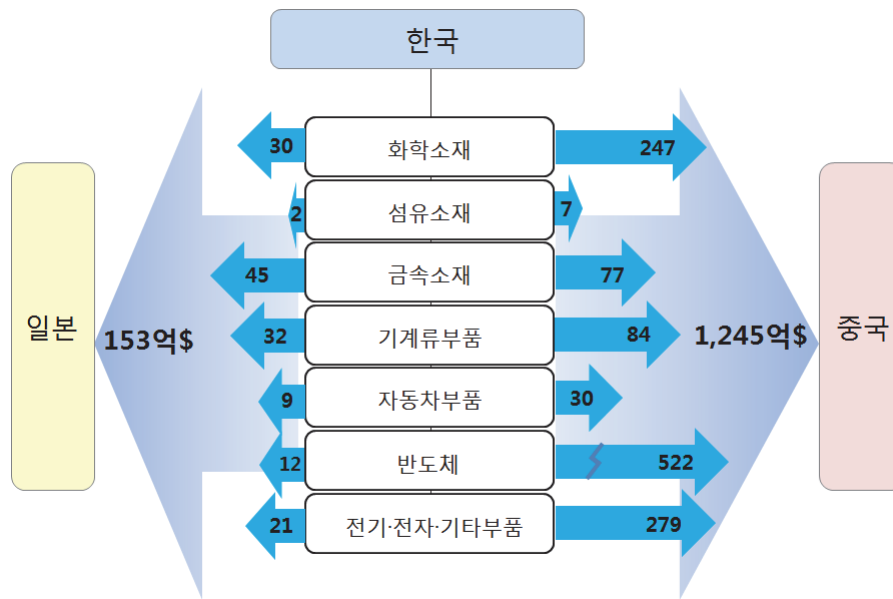
[표 2] 소재·부품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수 출		수 입		소재·부품 무역수지
	전산업	소재·부품	전산업	소재·부품	
2001년	1,504	620	1,411	593	27
2005년	2,844	1,238	2,612	1,011	227
2010년	4,664	2,290	4,252	1,512	778
2015년	5,268	2,646	4,365	1,596	1,050
2018년	6,049	3,162	5,352	1,772	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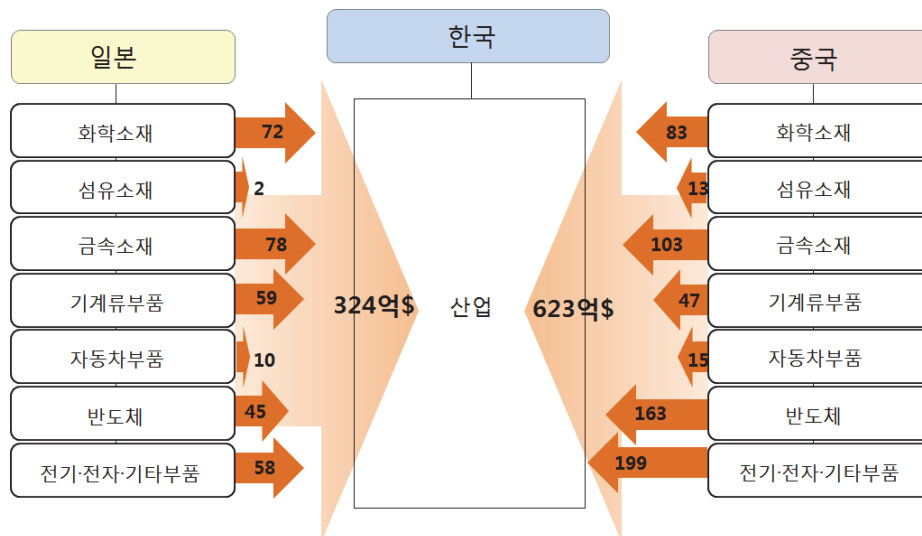
자료: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소재부품분야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지난 5년 소재부품분야 대일무역적자는 연평균 200억 불)
 - 기업이 글로벌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가격과 기술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는 자유무역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함
 - 중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를 추구한다면 우리 또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2〉 한국 소재부품산업 일본 및 중국 수출액 (단위: 억불)



〈그림 3〉 한국 소재부품산업 일본 및 중국 수입액 (단위: 억불)



-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對 중국 소재부품 수출금액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1,245억 불로 소재부품분야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혹은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과의 소재부품분야 무역적자는 171억 불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흑자(622억 불)를 통해 만회하고 남음이 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과 소재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과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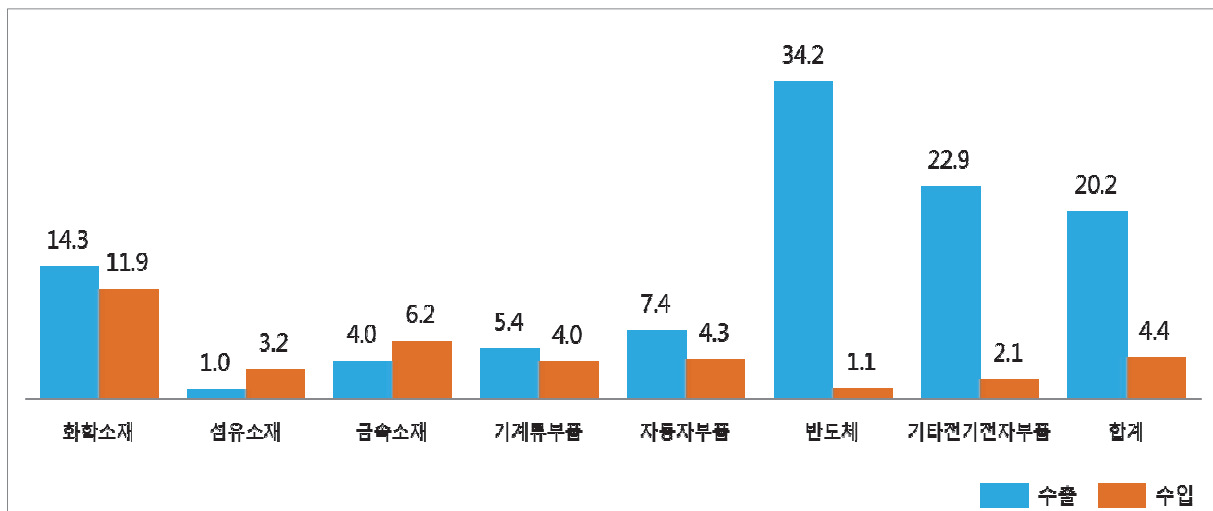
[표 3] 충남 소재부품산업 수출입 현황 (2018년 MTI 기준)

구분	수출			수입		
	전국(억 \$)	충남(억 \$)	비중(%)	전국(억 \$)	충남(억 \$)	비중(%)
화학소재	591	84.2	14.3	281	33.4	11.9
섬유소재	51	0.5	1.0	32	1.0	3.2
금속소재	441	17.8	4.0	368	22.7	6.2
기계류부품	359	19.5	5.4	274	10.9	4.0
자동차부품	231	17.1	7.4	54	2.3	4.3
반도체	1,267	433.7	34.2	447	4.8	1.1
기타전기전자부품	786	180.2	22.9	483	10.3	2.1
합계	3,726	752.9	20.2	1,940	85.4	4.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2018년 기준 충남의 소재부품산업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3억 불과 85억 불로 전국대비 20.2%, 4.4%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보다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충남의 소재부품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434억 불로 가장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1/3에 해당하며 기타전기전자부품도 180억 불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함
 - 수입가운데는 화학소재가 33억 불로 전체 화학소재 수입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소재 역시 전국수입의 6.2%를 차지함
 -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경우 핵심소재부품 부족에 따른 충남의 생산과 수출 역시 차질을 빚을 것임

〈그림 4〉 전국 대비 충남 소재부품산업 수출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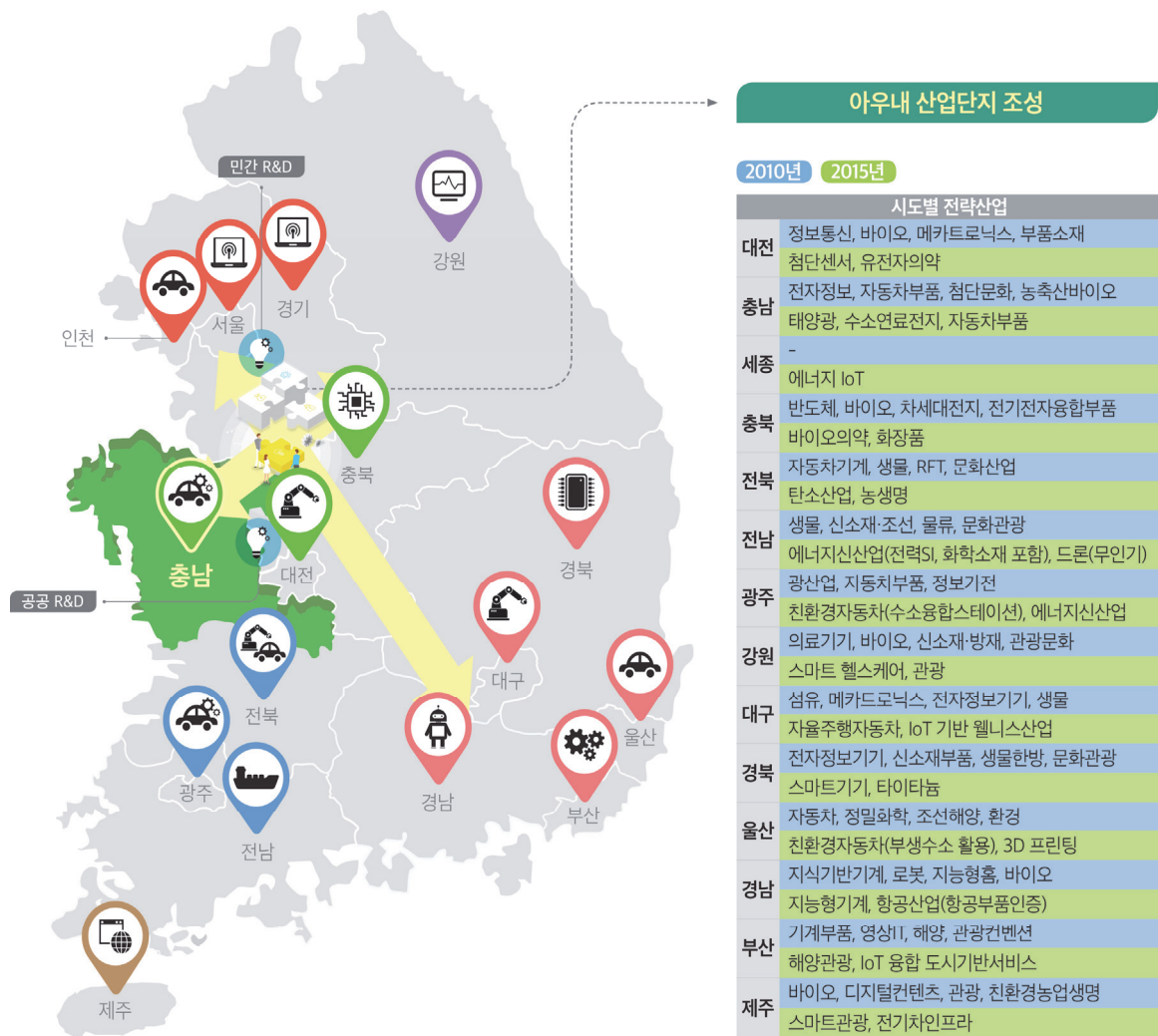
04

‘아우내 산업단지’와 충남형 개방혁신 플랫폼의 제안

- 100년 전 아우내 장터³⁾에서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적 강점에 항거한 유관순 열사가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만세를 불렀는데 비폭력적이고 자발적인 국민 만세운동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갔음
 - 당시에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이며 실패한 저항운동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아우내 장터’는 10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으로 이어져오고 있음
 - 100년 전과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음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확보,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음
 - 아울러 수요자(대기업)-공급자(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1년 이내 20개 품목, 5년 이내 80개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체수입국 확보, 세제지원, R&D자금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 2021년 일몰 예정된 소재부품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임
- 충남은 100년 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롭게 ‘아우내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우내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교통과 물류의 요지에 소재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민간R&D와 대전의 공공R&D를 연결하는 소재부품 산업의 자강(자립적이고 강한)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함

3) 아우내는 ‘2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뜻으로 경상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 천안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인근 청주·진천·조치원·예산 등의 농산물과 소를 사고파는 장터가 열림

〈그림 5〉 시도별 전략산업 및 충남 '아우내 산업단지'



- 전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자동차, 신소재 산업 등이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데 민간기업 R&D는 주로 인력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에, 공공 R&D는 국책연구원, KAIST 등이 소재한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그림 5 참고)
 - 정부 부처(세종시)와의 긴밀한 협조, 충남도의 현장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시범사업으로서의 '아우내 산업단지' 1호를 성공시키고 전국으로 확산
 - 충남은 현재 '성환중축장부지'⁴⁾를 '국가제조혁신파크'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를 '아우내 산업단지'와 연결할 것을 제안함

4) 충청남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2018), p.235.

- 충남에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등 소재부품관련 대기업이 위치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강소기업들이 부족한 상황임
 -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불화수소정제기술을 보유하여 반도체 업계에 불화수소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소재하는 등 충남은 소재부품분야 산업 중심지로서 가능성이 큼

〈그림 6〉 ‘아우내 산업단지’, 충남형 개방혁신 플랫폼(안)



구분	내용
지역혁신 인센티브	물류/R&D 지원체계 정비 등 포함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차원’
충남형 일자리 인센티브	(‘고용지원’) 주거·복지·문화·환경 지원
에너지 인센티브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보상과 연계, ‘기업유치 및 창업활동 지원’
밀착형 기업지원 인센티브	‘One stop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 충남도는 ‘아우내 산업단지’ 1호를 시작으로 지역 내 또 다른 ‘아우내 산업단지’를 추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충남도의 경제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함
 -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혁신의 정신과 성과가 퍼져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 소재부품 뿐 아니라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따른 농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이 ‘아우내 산업단지’와 관련 검토되어야 함

- 지역혁신 인센티브

- 지역에 산재한 물류거점과 R&D거점 등을 소재·물류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파악하여 대기업(수요자)-중소기업(공급자)에게 연결하고 세제 및 자금 등을 정부 지원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협력 지원함
- 정부가 제시한 기업 간 협력모델 4가지 가운데 충남도에 적합한 모델(예: 수요-공급자 혁신 R&D 모델 등)을 선정하여 대기업 및 입주 가능한 중소기업 혹은 신규 투자자와 연계함

- 충남형 일자리 인센티브

- '아우내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미래의 리더인 청년들에게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이웃과의 화해를 거부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짐
- 광주형 일자리처럼 산업단지에서 일하게 될 청년들에게 주거, 복지, 문화, 환경 등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함

- 에너지 인센티브

- 충남 서해안에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아우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값싸게 공급하여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생산환경 제공
- 화력발전소 인근거주 청년들에 대한 산업단지 우선취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격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4]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부 지원
수요-공급자 협동R&D 모델	기술로드맵공유, 공동 R&D 협력	R&D우선지원, 공공구매가점, 후속R&D 우대, 거래기준 명확화
수요-공급자 공급망 연계 모델	국내생산 확충, 공동시설 투자	양산라인 평가확대 및 소요비용지원, 지방세 감면율 확대
수요-수요자 공동투자 모델	협력사 공유, 공동개발시설투자	임대전용 산단 우선입주,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수요-수요자 공동재고 확보 모델	해외공급처 공동발굴 및 구매, 공동물류 및 저장	해외 공동물류센터 활용, 보세구역지원, 저장기간 연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08.05).

- 밀착형 기업지원 인센티브

- 현재 충남도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소재부품 수급애로 및 피해를 파악하고 종합지원하고 있음
- 향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본 및 중국의 소재부품산업을 뛰어넘는 기술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ONE STOP 기업지원서비스로 확대되어하여야함

- 충남도는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으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자립적인 국가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대외 위협요인'을 치밀하게 파악(연구)하여 이에 상응하는 '아우내 산업단지' 추진이 필요함

* 충남연구원 일본수출규제대응 TF단

김 진 기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041-840-1173, jk030423@cni.re.kr

방 만 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

충남연구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041-840-1111, bangmg@cni.re.kr

*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임 재 영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041-840-1160, chyim@cni.re.kr

이 종 윤 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041-840-1166, space@cni.re.kr

참고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http://www.motie.go.kr> (검색일 : 2019.08.05).
- 충청남도,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2018).
-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한국의 소재산업도 위협하고 있다!,” 『현안과 과제』(2014.03.05).
- 현대경제연구원,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2019.07.26).
- “Martin Wolf on Bretton Woods at 75: global co-operation under threat”,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 (검색일 : 2019.7.10).